

6·25 42주년 기념 방위산업 대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新 東北亞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할 안보 정책방향의 모색과 기술주권시대, 경제 발전과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산업 정책개발을 도모하는 대토론회가 7월 1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4백여명의 産·學·研·官 관련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방위산업학회의 공동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격변기, 한국 안보의 새 進路」를 주제로 하여, 기조연설과 특별 강연, 주제발표, 종합토론順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의 하이라이트였던 종합토론을 요약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발표順).

* 殷寅永 국방대학원 교수



기업은 도산하더라도 再生의 길이 있으나, 국가가 패망하게 되면 再生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베트남이 그랬고, 6·25 참전 16개국중 하나였던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도 이미 공산권으로 넘어갔습니다.

국가도 경영을 잘못하면 도산(倒産)하거나 패망할수 있다는 것을 현시점에서 새롭게 인식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방위산업과 국가와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SDI 이야기가 나왔을때 벌써 앞으로의 전쟁의 양상은 어떻게 바뀌어지리라고 하는 것은 예견했어야 옳았다고 봅니다. 적어도 그점에서 몇년간의 시차(時差)가 있었다고 봅니다.

또한 정부가 여러 업체에 방향을 제시할때는 상당한 장기적인 예견성을 가지고 여러 업체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와 함께 방향전환을 예고(予告)해주어야 옳다고 보며, 여러 업체에서는 정부의 방향전환 이전에 세계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도 軍구조를 바꾸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육군이 상당히 줄어들고, 해군과 공군쪽에 더많은 비중으로 예산 재편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수 있는 것도 여러분의 체질속에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 朴勝平 한국일보 논설위원



언론인의 입장에서 제기 해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안보 현실이나 국민들의 안보 의식은 상당히 실제상황 과는 괴리감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은 지금 「안보기피증」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게된 배경을 언론의 시각에서 볼때, 우선 지도층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소련을 다녀와 전쟁 걱정이 사라졌다는 정치적 발언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核不在 선언도 거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원자력발전소가 즐비한 나라에서 핵연료 재처리시설마저 갖지않겠다고 서둘러 약속을 한 것이, 결과적으로 비싼 돈을 외국에 주고 재처리해와야 할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총력안보라면서 안보문제의 운영에서 국민적 합의나 설득절차가 생략되기가 일쑤였고, 오히려 접근하기 어려운 성역(聖域) 이다시피한 것도 많았습니다.

민주체제의 진정한 힘은 창의성과 애국심과 사회정의에 바탕한 국민적 합의에서 우러나옵니다.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달리 안보문제에 대한 보다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金學玉 국방과학연구소장



“기술은 국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기술의 중대성만을 논하고 있을뿐, 확실한 정책의 반영이나 전략을 세워놓지 못한 것이 현실태입니다. 우리가 일본사람과 미국사람만을 욱하고 있지, 그들을 따라잡을만한 계획이나 전략등을 수립해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살아나가고, 防産이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기술개발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살려야 합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미국의 전차보다도 4배나 비싼 일본제 전차, 미국의 M16 소총보다 14배나 비싼 일본의 소총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정책은 국산화율이 높을수록 손해를 보게되는 우리의 조달정책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우리의 기술개발전략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확보를 위해 기술관료를 대폭 증원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 기술관료의 분포를 보면 4~5급 공무원의 경우는 그 비율이 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급으로 올라갈수록 비율이 낮아져서 2급의 경우 12% 정도이며, 1급의 경우 거의 제로상태라고 합니다.

물론 과학기술처는 이보다 훨씬 높은 비율의 기술 관료를 보유하고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체의 핵심부서인 경제기획원에는 고급은 물론 4~5급의 직위에도 기술관료들이 전혀 채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기처의 목소리가 경제기획원까지 전혀 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봅니다. 국방부도 똑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金尚憲 (주)풍산社長



국가안보자산으로서 방위산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퇴조되는 가운데, 방위산업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軍 수요의 감소로 인해, 대부분의 방산업체 가동율이 저하되고 있는 점입니다.

특히 기본병기 수요에 대한 급격한 감소추세로 국내 방위산업의 대부분을 점하는 기본병기 방위산업체의 존립기반이 상실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어 산·학·연·관各界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인 방산육성意志가 제고되어야 하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방산물자 조달계획이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방산진흥회가 발행하는 월간 <국방과 기술>誌(92/6월호)에 관계 당국자께서 정부의 장기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서 선보이시겠다고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 대단히 환영하며, 기대가 큼니다.

또한 제한된 국내수요를 극복할수 있는 수출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방산수출 금융제도의 확대방안으로 연불수출지원제도를 보완해서 대상 품목을 확대함으로써, 수요창출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긴급수출수요의 발생시에는 軍 보유물량을 무상대여하고, 수출후에 현물상환하는 제도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끝으로 국방연구 개발에 대한 지원 및 개선대책의 수립과 시행문제입니다. 현재 정부의 방침은 정부주도 개발로부터 업체주도 개발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디만, 이 정책은 현실적으로 구분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康 奉 均 경제기획원 차관보



방위력에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술이 따라가지 못하는 방위력 증강을 과연 증강으로 볼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質과 기술에 있습니다. 방위력도 현재의 數 개념

에서 質과 기술집약적인 면으로 가야 합니다.

이에 몇가지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더욱 빠른 시일안에 국방연구개발비율이 上向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 등 선진국의 전략적 기술집약화를 먼저 주시해야 합니다. 선진국들의 국방연구개발비율은 대폭 증가되어 왔으며, 미국은 60년대이후 10%이상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둘째, 기술개발업체에 대한 배려가 뒤따라야 합니다. 현재 막대한 방산물자를 조달하고 있

습니다. 품질과 기술향상에 따른 성능향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현재 低價 입찰제도는 再考되어야 합니다. 먼저 품질요소, 기술요소부터 평가한후 입찰로 이어져야 하겠습니까.

셋째, 정보체계의 과감한 개방만이 기술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방위산업과 경제의 연계자료를 찾아볼수 없습니다. 정보의 차단속에 기술개발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보체계의 개방속에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도 가능할 것입니다.

* 金 信 行 서울대 교수



안보는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운용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국민적인 합의도출이 선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술과 안보, 경제는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순환

과제입니다. 방산과 민수의 유기적인 연계와 조정이 뒤따라야 하며, 기술연구개발 투자시에도 경제성과 시장성을 민간부문과 연계시켜, 효과적인 운용이 되도록 정부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 朴 熊 국방부 제2차관보



방산업체의 발전이나 무기체계의 발전은 국방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국방비는 GNP의 3.7%선입니다. 절대금액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진국은 4~5%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방비중 인건비를 제외하고 전력증강예산에는 30~33%가 쓰이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전년 대비 6.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물가는 9%이상 올랐으며, 장비는 高價化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히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前年對比 20~25%의 증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